

서남권·F1특별법 9월 정기국회 통과될까

대선·국감 맞물려 이번에도 불투명

“무산됐 참여정부내 제정 물거품” 전남도 다각적 대책 마련 추진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서남권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과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각각 건교위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 대선국과 국감맞물려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낙후지역인 전남 서남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남권특별법의 경우 서남권의 범위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갈등과, ‘전남 서남권만 낙후되어 있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치권이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임시 국회 막바지인 지난 6월 21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위에 상정된 데다, ‘전남 서남권만 개발하자는데 대한 거부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서남권 특별법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전남 서남권 개발을 약속한’ 참여정부 임기 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

별법 제정과 같은 특정 지역의 현안은 정치권의 시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특별법이 다뤄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9일 목포시청에서 ‘서남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건교위 소속 위원회의 법 제정 성향을 분석,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서남권 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F1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F1특별법의 경우 지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논란이 빚어졌던 각종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F1대회 운영법인인 KAVO의 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특별법과 F1특별법 제정은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현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참여정부 임기 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DJ “대북송금 특점 매우 유감”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30일 “대북송금 특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교동 사저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신기남 후보 부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도 모든 것을 상의하고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일”이라며 “이것이 말이 맞았다면 신 후보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임동원, 신 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그렇게 처리한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 분당 사태를 언급, “분당은 아쉬운 일”이라며 “정치인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기다려서 해야 지지

가 따르는 법”이라며 우리당 창당 과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 만난 자리에서 분당에서부터 창당 후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신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 합류에 대해 “신 후보가 우리당에 가진 애착을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여망에 의해 대통합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민주신당과 신 후보가 선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세균 전 의장 등 우리당 전직 지도부와 면담 때 이어 신 후보를 만나서도 민주당 분당과 대북송금특점, X-파일 문제를 거듭 지적한 놓고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과 친노 그룹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 논란

■실체 드러낸 민주당 선거인단 부정 대리접수 친노후보 “유령 선거인단 동원” 반발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령 등록’ 등 부정 대리접수를 둘러싼 논란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실체를 드러냄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제출하도록 돼있

어 경선후보 캠프들이 경쟁적으로 선거인단 확보에 나서면서 본인의 동의조차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된 96만여명에 대해 28, 29일 이틀 동안 자동전화시스템(ACS)을 이용해 본인의 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 몇몇 당 출입기자에 대해 확인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선거인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 자사 기자에게 민주당 국민경선위의 전수조사 번호(02-3780-8888)가 찍힌 확인전화가 걸려왔다고 30일자 신문에 보도했고, 인터넷 매체인 ‘프리존뉴스’도 동아일보 기자와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전북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의 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가신청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국가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특정 경선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인단 대리접수 허용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이해찬 한명숙 등 친노후보 진영은 “유령 선거인단 동원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후보측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예상해 대리접수에 반대했던 것”이라며 “인터넷 IP를 추적하면 누가 어디서 선거인단을 입력했는 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허위로 한 경우에는 경선위가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하니가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방식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에 사용된 자동전화 메시지는 ‘선생님께서는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참여하셨다면 수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문구다.

자동전화 기계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1번을 누르지 않고 머뭇거리는 경우 전화가 끊기면서 진정 선거인단으로 분류된다.

부정 대리접수 의혹과 전수조사 방식을 놓고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선거인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데 확인전화를 받았다며 항의하거나 전수조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9명의 홍보팸플릿. 이 홍보물들은 민주당 국민경선위를 통해 컷오프 선거인단 1만명 전체에게 발송된다. /연합뉴스

“나 빠진 경선은 흥어 없는 잔치”

전정배 후보 광주 방문

대통합민주당 전정배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민주당 경선에서 개혁후보인 내가 빠진다면 ‘흥어 없는 잔치집’이 돼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이날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해찬·유시민 등 이른바 ‘친노 후보’를 겨냥한 듯 “지난 5년에 대한 반성 없는 친노후보가 경선에 여럿 오르게 되면 경선 전체가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는 또 문국현 후보와의 연대문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은 나와 문 후보 등 개혁세력의 연대”라고 운을 댄 뒤 “대통합민주당 중심

의 통합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말해 문 후보를 합류시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KBS 본사 광주 이전 ▲동북아 명소 ‘서남해안 오아시스’ 프로그램 추진 ▲아시아의 문화 허브 광주 건설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내달 5일 컷오프 후보 5명 압축 순회 경선 10월 15일 후보 확정

■민주당 경선 어떻게

대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선 절차와 방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다음달 3~5일 예비경선을 치러 9명의 후보 중 본 경선에 참여할 5명을 뽑은 뒤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경선을 실시하고 10월 15일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개최한다.

9월 5일 후보 5명 압축=예비경선은 다음달 3~5일 1인2표제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예비경선 모집단은 67만5천838명. 민주당은 이중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인단 여론조사와, 일반국민 2천400명을 대상으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

는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예비경선 결과를 도출한다.

10월 15일 대선후보 지명=본경선 후보 5명이 정해지면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TV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후보간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된다.

순회 경선은 9월 15일 울산·제주를 시작으로 ▲16일 강원·충북 ▲29일 광주·전남 ▲30일 부산·경남 ▲10월 6일 대전·충남·전북 ▲7일 인천·경기 ▲13일 대구·경북 ▲14일 서울 등의 순서로 매주 토, 일요일 8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경선결과를 당일 발표한다. 대선 후보 지명대회는 순회경선이 끝난 다음날인 10월 15일 개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

문국현 솔루션 (Mun Guk Hyun Solution)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job opportu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political candidate or organization,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vertical text.